

#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평가와 2012년 대선 공약

권정현 (미국 보스턴칼리지 박사과정(경제학))

## ■ 머리말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미국의 경기침체는 20세기 초 대공황의 위기 이후 맞게 된 최대의 경기침체였다. 실업률은 2007년의 4.4% 수준에서 급격히 상승해 2009년 10월에는 10.2%에 이르렀으며 매달 7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 모색은 2008년 미 대선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으며 당선 수락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위기를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4년 동안, 대규모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었고 점차적인 경기 개선으로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은 극복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7%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기부양과 일자리 관련 정책은 다가오는 2012년 대선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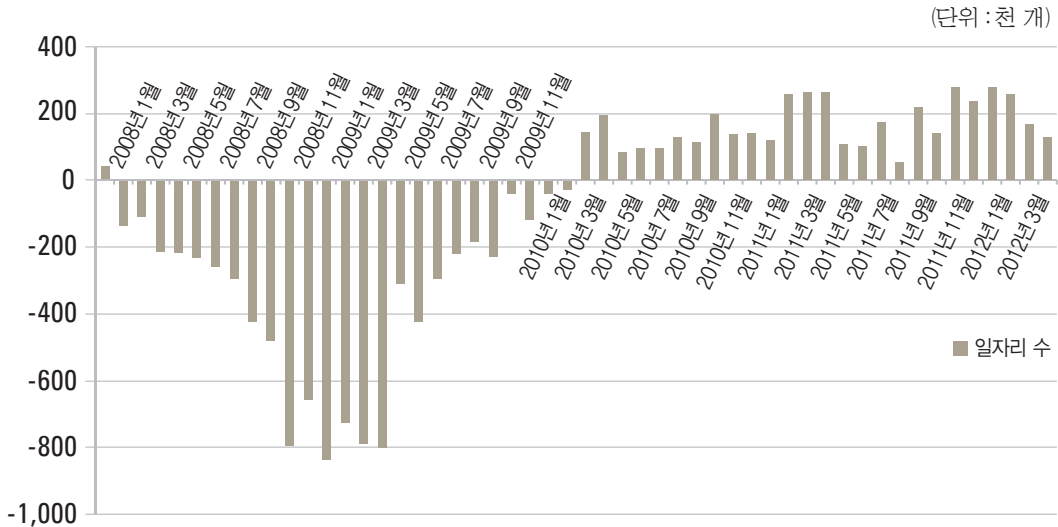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 지난 4년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경기부양책과 노동분야 정책들의 시행과 효과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2012년 선거운동에서 오바마 선거캠프는 어떠한 새로운 경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2008년의 상황과 비교해 새로운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 ■ 오바마 집권 기간 동안의 경제지표 변화

### 일자리창출

최악의 경기침체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 초에는 매달 7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취임 직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당의 지원으로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법안이 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었고 이후 점차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일자리 수는 2010년 3월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12년 4월 기준 420만 개의 민간부문 일자리가 증가했다. 미국 경제위기 후 일자리의 증가는 대부분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이 상당한 실효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일자리 증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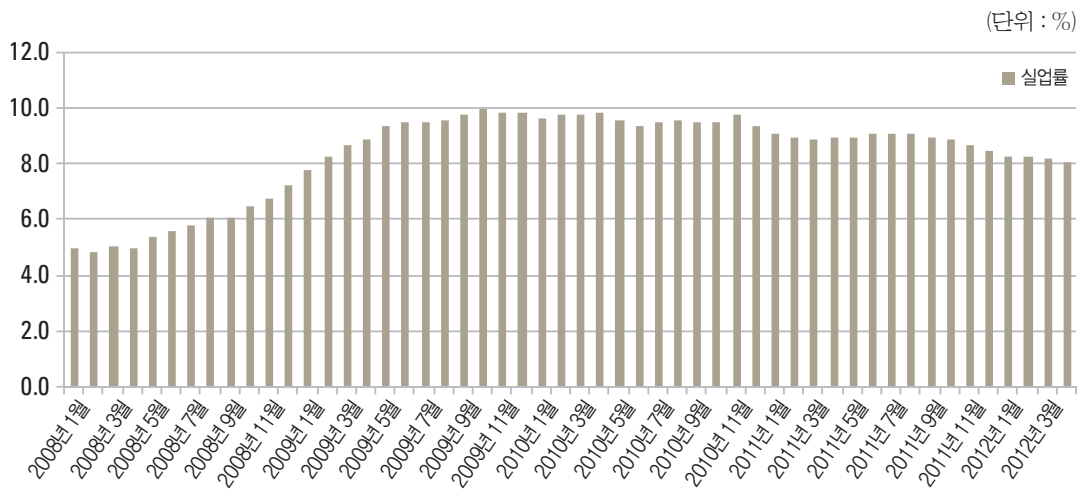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실업률 변화

그러나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8%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지표와 상반되는 이와 같은 실업률 지표는 여전히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업률 지표의 경우, 구직자 수(노동시장 참가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가율의 증가가 구직자 수의 증가로 이어져 높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2]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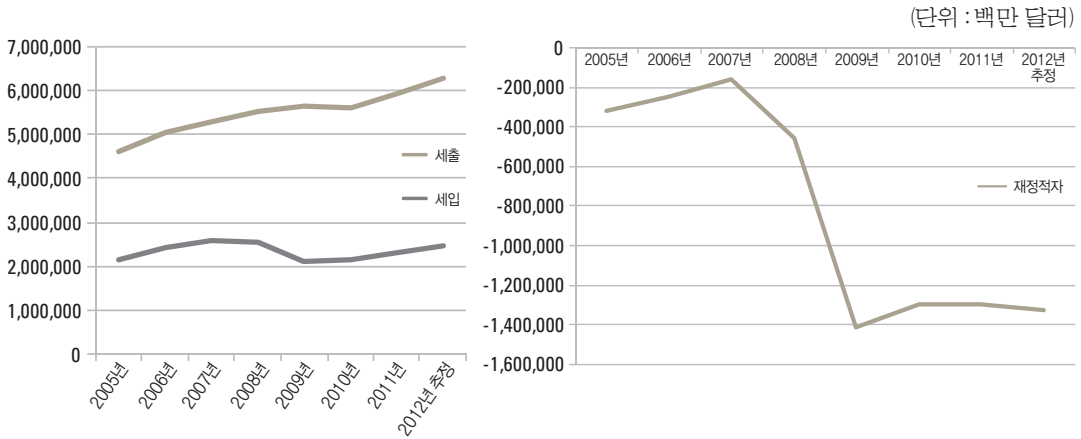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재정지출과 재정적자

2013년 예산안에서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자를 10년에 걸쳐 1조 달러 줄이는 안을 제시했으나 그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정부지출은 1946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GDP의 24% 수준에 이르렀으며 재정적자 규모도 2009년 이후 크

[그림 3]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좌)과 재정적자(우)



자료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게 증가했다.

큰 폭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는 오바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세 혜택과 구조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또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일견 상반되는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 수입을 오바마 정부는 GDP 상승에 따른 세입의 증가로 충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쪽은 5% 수준의 GDP 상승에 대해 회의적이며 세율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 ■ 주요 시행 정책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

2009년 2월, 집권 직후 가장 먼저 의회 승인을 얻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법안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일자리창출과 유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95%의 근로자 가구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이다. 감세뿐만 아니라 교육산업과 에너지산업 분야 등의 일자리창출과 유지를 위한 긴급자금지원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 시행의 예

---

산은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8,310억 달러가 배정되어, 기간산업과 교육, 의료에너지, 세금 감면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 등에 자금이 투자되었다.

## American Job Act

2011년 의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American Job Act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이 있었다. American Job Act는 건설산업 부문 소규모 사업장과 노동자들, 교사, 퇴역군인들과 장기실업자 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포함하고 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체에 세금 혜택을 주고 근로소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 경기부양을 도모하려 했다.

두 경기부양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에서 그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과대한 정부지출에 비해 그 실효성의 규모가 작은 점과 재정적자 증가의 주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 제조업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

Reinvestment Acts에 따른 자동차산업 긴급구조조정 지원으로 GM과 크라이슬러 등 미 중서부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몰락을 막고 1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 이후 23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창출 기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금을 이용해 몰락 위기의 특정 기업들, 즉 GM과 크라이슬러를 지원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원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침체, 특히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또한 오바마 정부의 무역 정책 기조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그 방편으로 콜롬비아와 한국과 각각 FTA를 체결하였으며 부시 정부에서 이루어진 협정 내용을 개정하기도 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내용의 개정 요구를 2008년 대선 캠페인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보호무역주의의 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무역기조 변화는 미국 내에서도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나누어져 이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무역기조의 변화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른바 자국 산업의 보호조치이다. 오바마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구조조정 지원은 이러한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 공화당 후보 Mitt Romney의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오바마 정부와 달리 롬니 공화당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려 한다. 롬니 선거캠프에서 제시한 “Free enterprise, Free choice, Free speech” 공약은 이러한 롬니 공화당 후보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 공약은 노조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노동자 개인의 노동권(Right-To-Work) 보장 확대로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려는 안이다.

오바마 정부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업률 수준은 여전히 높다. 지난 5월 미국 실업률은 8.1%를 기록했다. 높은 실업률 수준은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도 주요 쟁점사안이며 오바마 정부에 대한 주된 비판 사안이다. 롬니 공화당 후보는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최근 6%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 실업률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 시절 매사추세츠 주의 높은 실업률 수치로 인해 그의 일자리창출과 실업률 감소 공약은 비판을 받고 있다.

## ■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정책 제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뉴욕주 알바니에서의 대선 캠페인에서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 모기지(mortgage) 이자율 인하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규 채용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금 지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취업 지원과 미국 내 일자리창출 제조업 지원 등 다섯 가지의 이른바

---

To-Do-List를 제시했다.

이 연설에서는 남은 집권 기간뿐만 아니라 재집권 시에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 부양과 일자리창출 지원의 지속이 오바마 경제정책의 주요 골자를 이룰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4,47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정부지출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들은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실업 감소 등의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증가를 동반해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지적과 함께 그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새로운 집권기에도 의회, 정확히는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LI**